

입법정책정보

-제18호-



대전광역시의회

○ 입법정책정보는 대전광역시의회의원의 의정활동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국회, 정부, 지방자치단체 등의 법령 또는 조례의 제정·개정 사항과 최신 외국정보 등을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세계법제정보센터에서 참고하여 정리한 것입니다.

○ 대전광역시의회 홈페이지를 통해 매월 정기적으로 제공됩니다.

|| 목 차 ||

I. 상위법령 제·개정	1
1.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시행령	1
2.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시행령	10
3. 치매관리법 시행규칙	13
II. 다른 자치단체 조례 제·개정	17
1. 인천광역시 산업보안 강화를 위한 지원 조례	17
2. 경상남도 장수노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19
3. 제주특별자치도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	21
III. 자치법규 참고정보	26
IV. 최신 외국 입법정보	31

I 상위법령 제 · 개정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시행령

[시행 2024. 6. 14.] [대통령령 제34552호, 2024. 6. 4., 제정]

□ 제정 · 개정이유

분산에너지 활성화를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 에너지공급의 안정을 증대할 수 있도록 일정 지역에 대해 에너지사용량 일부를 분산에너지로 충당하도록 의무화하고, 전력계통영향평가 대상 지역에서 일정 규모 이상의 전기사용을 하려는 자는 전력계통영향평가를 실시하도록 하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시·도지사의 신청을 받거나 필요시 직접 에너지위원회의 심의·의결 등을 거쳐 분산에너지특화지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이 제정(법률 제19437호, 2023. 6. 13. 공포, 2024. 6. 14. 시행)됨에 따라, 분산에너지의 범위, 분산에너지 설비 설치계획서 제출의무자, 전력계통영향평가 대상지역 및 실시대상 사업자, 분산에너지 특화지역의 지정신청 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 주요내용

제2조(분산에너지의 범위)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하의 에너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에너지를 말한다.

1. 「전기사업법」 제2조제17호에 따른 전기사업용전기설비 중 발전설비용량이 40메가와트 이하인 발전설비에서 생산하는 전기에너지
2. 「전기사업법」 제2조제18호에 따른 일반용전기설비 중 발전설비에서 생산하는 전기에너지
3. 「전기사업법」 제2조제19호에 따른 자가용전기설비 중 발전설비에서 생산하는 전기에너지(같은 법 제31조제2항 단서에 따라 전력시장에서 거래하는 전기에너지는 제외한다)
4. 「집단에너지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집단에너지를 생산하는 발전설비 중 발전설비용량이 500메가와트 이하인 발전설비로서 에너지 사용지역과의 근접성 등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발전설비에서 생산하는 전기에너지
5. 「집단에너지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업자 및 그 밖의 자가 생산하는 시간당

430기가칼로리 이하인 열에너지

제3조(중소형 원자력 발전사업의 범위) 법 제2조제2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및 요건을 충족하는 사업”이란 원자력발전소의 모듈(module: 한 기의 원자로가 내장되어 독립된 발전설비로서 작동 가능한 시설 단위를 말한다)당 발전설비용량이 500메가와트 이하인 경우로서 「원자력안전법」 제10조제1항 및 제20조제1항에 따른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건설허가 및 운영허가를 받은 사업을 말한다.

제4조(신재생에너지사업의 범위) 법 제2조제2호바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에너지”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수소에너지, 같은 호 나목에 따른 연료전지 및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재생에너지를 말한다.

제5조(연료전지발전사업의 범위) 법 제2조제2호바목에서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연료전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기를 공급하는 사업”이란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연료전지를 이용하여 생산하는 전기를 공급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10조(분산에너지 설비 설치계획서 제출의무자) 법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의무설치자”라 한다)를 말한다.

1.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로서 연간 20만메가와트시 이상의 에너지 사용이 예상되는 건축물(병원, 학교 및 그 밖에 건축물의 용도, 기능 등을 고려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을 신축 또는 대수선하는 경우 해당 건축물의 소유자
2. 법 제13조제1항제2호가목부터 마목까지의 사업 중 사업면적이 100만 제곱미터 이상인 사업의 시행자

제11조(분산에너지 설비 설치계획서의 내용 등)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분산에너지 설비 설치계획서(이하 “설치계획서”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업의 개요
2.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에너지사용계획 중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에너지 수요예측(이하 “연간 예상 에너지사용량”이라 한다) 및 에너지 공급계획
3. 연도별 분산에너지 설비 설치계획
4. 법 제13조제4항에 따른 의무설치자가 설치해야 하는 분산에너지 설비 설치량(이하 “의무설치량”이라 한다)의 산정결과
5. 분산에너지 설비 유지·운영 계획
6. 분산에너지 설비 설치단가
7.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분산에너지 활성화 및 에너지 공급의 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제12조(의무설치량의 산정방식)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의무설치량을 정할 때 전력수급 여건 등을 고려하여 지역별·연도별로 의무설치량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역별·연도별 의무설치량의 구체적인 산정방식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3조(의무설치량 산정결과에 대한 검토기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13조제4항에 따라 제출된 의무설치량의 산정결과를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검토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을 고려해야 한다.

1. 연간 예상 에너지사용량의 적정성
2. 제11조제3호에 따른 연도별 분산에너지 설비 설치계획상의 분산에너지생산량 산정의 적절성
3. 의무설치량의 계산이 제12조에 따라 이루어졌는지 여부
4. 분산에너지 설비 설치의 적절성

제14조(의무설치량 산정결과에 대한 검토의견의 통보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13조제4항에 따라 의무설치량 산정결과가 제출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무설치량 산정결과에 대한 검토의견을 의무설치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3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검토의견을 통보하는 경우 법 제13조제5항에 따라 의무설치자에게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의무설치량 산정결과에 대한 조정·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제15조(의무설치량의 확인 등) ① 의무설치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제14조제1항에 따른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검토의견을 반영하여 의무설치량 이행을 위한 분산에너지 설비를 설치해야 하며, 설치를 완료했을 때에는 30일 이내에 분산에너지 설비 설치의 확인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청해야 한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분산에너지 설비 설치 확인의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제14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검토를 거친 의무설치량에 적합하게 설치되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의무설치자의 분산에너지 설비 이용 현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할 수 있다.

제25조(전력계통영향평가 실시대상 사업자) 법 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전기를 사용하려는 사업자”란 전기판매사업자와 전기사용계약을 체결하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1. 10메가와트 이상(10메가와트 미만을 사용하다가 추가적으로 용량을 증가하여 10메가와트 이상이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전기를 사용하려는 사업자

2. 전력계통영향평가를 실시한 후 추가적으로 10메가와트 이상의 전기를 사용하려는 사업자
제26조(전력계통영향평가 제외대상 사업 등) 법 제23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1.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국가첨단전략산업에 속하는 사업
2.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9조제1항에 따른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에서 국가첨단전략산업의 육성·보호를 위해 전력계통영향평가 제외대상으로 의결한 사업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기반시설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업
4.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첨단산업의 유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업

제27조(전력계통영향평가의 기준 등) ① 법 제23조제3항에 따른 전력계통영향평가의 세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전력계통영향평가를 실시해야 하는 사업자(이하 “계통영향사업자”라 한다)에 대한 전기의 공급 이후 전기품질 및 전력계통의 신뢰도 유지 가능성
 2. 계통영향사업자에게 전기를 공급하기 위해 필요한 전력설비(변전소, 송전선로 및 그 부속설비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신설 또는 보강·대체 등의 난이도
 3. 과부하 방지 등 전력설비에 대한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계통영향사업자의 대응방안
 4. 그 밖에 계통영향사업자가 실시하려는 사업이 그 주변 지역에 미치는 사회적·경제적 영향의 평가를 위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② 제1항에 따른 전력계통영향평가를 위한 세부적인 평가항목 및 방법 등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28조(전력계통영향평가서의 제출 시기 등) ①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전력계통영향평가의 실시대상 사업 또는 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등”이라 한다)에 대한 승인·인가·허가 또는 지정 등(이하 “승인등”이라 한다)을 받아야 하는 계통영향사업자는 그 승인등을 신청하기 3개월 전까지 전력계통영향을 평가한 결과서(이하 “전력계통영향평가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법 제24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1. 「한국전력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전력공사
2.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전력계통 분야의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제32조(분산에너지특화지역 지정신청 절차 등) 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

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분산에너지특화지역 지정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신청서에 법 제35조에 따른 분산에너지특화지역계획(이하 “분산에너지특화지역계획”이라 한다)을 첨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시·도지사는 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민간기업 또는 시장·군수·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민간기업등”이라 한다)이 분산에너지특화지역계획을 제안하는 경우 제안일부터 60일 이내에 분산에너지특화지역 지정신청의 필요성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6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시·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검토 결과 분산에너지특화지역 지정신청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민간기업등이 제안한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함하여 분산에너지특화지역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제33조(분산에너지특화지역계획의 내용) ① 법 제35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분산에너지특화지역의 분산에너지 및 기반시설 현황
2. 분산에너지특화지역계획의 시행을 위한 자원 확보 방안
3. 분산에너지특화지역이 표시된 지형도면 또는 지적도(「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작성된 지형도면 또는 지적도를 말한다. 이하 같다)
4.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② 시·도지사는 법 제35조제2항에 따라 청취한 주민·기업 등의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분산에너지특화지역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제34조(분산에너지특화지역의 규제특례 검토)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36조제2항에 따라 분산에너지특화지역 지정신청 내용을 검토하는 경우 법 제35조제1항제4호에 따른 분산에너지특화지역에 적용되는 규제특례 사항(이하 “규제특례사항”이라 한다)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규제특례사항은 제외한다.

1. 규제특례사항의 적용으로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명백한 경우
2. 규제특례사항의 적용으로 관계 법령의 입법취지를 심각하게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36조제2항에 따라 분산에너지특화지역 지정신청 내용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통보할 때 규제특례사항에 동의하지 않거나 조건을 붙여 동의하는 내용의 의견을 제출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

제35조(분산에너지특화지역 지정의 고려사항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36조제3항에 따라 분산에너지특화지역계획을 승인하고 분산에너지특화지역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1. 분산에너지 활성화의 실질적 효과

2. 분산에너지특화지역 운영에 필요한 관할 시·도지사의 추진 역량
3. 분산에너지특화지역 내 에너지 공급의 안정성 및 현실성
4. 분산에너지특화지역 내 에너지 관련 첨단기술의 활용 가능성
5. 분산에너지특화지역에 필요한 기반시설의 확보
6. 해당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의 도시 개발 및 산업 발전과의 유기적 연계성 및 지속발전 가능성
7.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분산에너지특화지역 지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분산에너지특화지역 지정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도지사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이나 분산에너지특화지역계획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③ 법 제36조제3항에 따른 분산에너지특화지역계획의 승인 및 분산에너지특화지역의 지정에 관한 세부기준 및 절차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36조(분산에너지특화지역의 지정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36조제3항에 따라 분산에너지특화지역의 지정을 하려는 경우에는 그 지정신청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지정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3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제35조제2항에 따른 자료 제출 및 분산에너지특화지역계획의 보완에 걸리는 기간은 제1항에 따른 결정기간에 포함하지 않는다.

제37조(분산에너지특화지역의 지정 고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36조제4항에 따라 분산에너지특화지역을 지정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해야 한다.

1. 분산에너지특화지역의 명칭, 위치 및 면적
2. 분산에너지특화지역의 지정 목적
3. 분산에너지특화지역계획의 주요 내용
4. 분산에너지특화지역이 표시된 지형도면 및 지적도
5.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8조(분산에너지특화지역의 직권 지정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분산에너지의 활성화가 특별하게 필요한 지역을 분산에너지특화지역으로 지정하려는 경우 분산에너지특화지역계획을 직접 수립할 수 있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분산에너지특화지역계획을 직접 수립하는 경우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법 제35조제2항에 따른 공고 및 의견 청취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시·도지사가 청취한 주민·기업 등의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면 이를 분산에너지특화지역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분산에너지특화지역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④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라 분산에너지특화지역계획의 내용을 통보받은 경우에는 해당 내용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30일 이내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문서로 회신해야 한다.

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 등을 고려하여 「에너지법」 제9조에 따른 에너지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분산에너지특화지역을 지정할 수 있다.

⑥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5항에 따라 분산에너지특화지역을 지정한 경우에는 제37조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해야 한다.

⑦ 제1항에 따른 분산에너지특화지역의 지정에 관한 세부기준 및 절차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39조(분산에너지특화지역의 규제특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분산에너지특화지역에서 분산에너지특화지역계획의 시행과 관련하여 적용 가능한 「행정규제기본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행정규제의 일부 또는 전부의 적용 제외나 규제권한 이양(이하 “규제특례등”이라 한다)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발굴된 사항을 분산에너지특화지역에 반영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40조(분산에너지특화지역의 지정해제) ① 법 제40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분산에너지특화지역의 운영이 더 이상 불가능한 경우를 말한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40조제3항에 따라 분산에너지특화지역 운영에 대한 평가 결과 평가순위가 최근 5년 간 3회 이상 하위 100분의 5 이내에 속한 분산에너지특화지역을 직권으로 지정해제할 수 있다.

③ 시·도지사는 법 제40조제4항에 따라 분산에너지특화지역 지정의 해제를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을 30일 이상 주민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④ 법 제40조제5항 단서에서 “규제특례등의 적용 중지가 매우 곤란하거나 실익이 없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규제특례등의 적용이 중지됨에 따라 종전 분산에너지특화지역 내 전기사용자의 전기요금과 그 밖의 공급조건 등이 불리하게 변경되는 경우를 말한다.

제41조(분산에너지특화지역의 운영성과 보고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분산에너지특화지역 운영에 대하여 평가하기 위해 관할 시·도지사에게 평가연도 다음 해 3월 31일까지 분산에너지특화지역의 운영성과에 관한 보고서(이하 이 조에서 “운영성과보고서”라 한다)를 작성·제출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운영성과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해당 연도의 분산에너지특화지역 운영성과 및 다음 연도의 분산에너지특화지역의 운영

에 관한 계획

2. 규제특례등의 활용 실적
3. 분산에너지특화지역에서 추진하는 사업의 내용 및 추진 실적
4. 분산에너지특화지역이 지역경제에 이바지한 효과

제42조(분산에너지특화지역 운영성과 평가의 기준 등)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분산에너지특화지역 운영에 대한 성과를 평가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1. 분산에너지특화지역 지정의 정책목표 및 성과지표의 달성도
2. 분산에너지특화지역의 운영에 따른 지역경제의 활성화
3. 분산에너지특화지역 내 에너지 관련 첨단기술의 활용도
4. 규제특례등의 활용 실적 및 효과
5. 분산에너지특화지역에서 추진하는 사업의 추진 성과 및 달성도
6.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분산에너지특화지역의 운영에 대한 성과 평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3조(규제특례등의 사후관리)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분산에너지특화지역을 관할하는 시·도지사는 법 제42조제2항에 따라 규제특례등의 적용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점검할 수 있다.

1. 규제특례등에 대한 계획 이행 현황
 2. 규제특례등 부여조건의 이행 여부
 3.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규제특례등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② 분산에너지특화지역을 관할하는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점검을 실시한 후 점검 내용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규제특례등에 대한 사후관리의 구체적 방법 및 절차에 대해서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50조(분산에너지지원센터의 조직 등) ① (생략)

- ② 제1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분산에너지지원센터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참고사항 (우리 시 관련 조례)

「대전광역시 에너지 조례」

[시행 2022. 10. 14.] [대전광역시조례 제5904호, 2022. 10. 14., 일부개정]

제2조(기본이념) ① 대전광역시(이하 “시” 라 한다)는 지속가능한 에너지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에너지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는 에너지시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산업체 및 대전광역시민(이하 “시민” 이라 한다)·시민단체·학교·연구기관 등과 최대한 협의하여야 한다.

③ 시는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해당 지역의 신·재생에너지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에너지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5조(시의 책무) ① 시는 에너지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이용에 관한 종합적인 계획 및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는 지역적 특성에 맞는 에너지 자원의 발굴과 신·재생에너지의 보급을 위한 지원 방안 등 지속가능한 에너지체계를 마련하여야 한다.

③ 시는 신·재생에너지의 보급과 관련하여 인허가 등을 처리하는 경우에는 명백한 제한 규정이 없는 한 신·재생에너지가 보급될 수 있도록 장려하여야 한다.

④ 시는 에너지이용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 등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⑤ 시는 에너지이용 합리화를 위한 자치구 역할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자치구의 에너지이용 합리화 시책을 지원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⑥ 시는 학교·시민·시민단체 등의 연구 및 홍보사업 등과 같은 자발적인 에너지이용 합리화 활동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⑦ 시는 지속가능한 에너지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시책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에너지 다소비형 산업, 대형 발전·송전시설, 자원회수시설을 이용한 열병합발전소 시설이 입지할 경우에는 해당 지역주민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6조(사업자의 책무) ① 사업자는 에너지 효율을 높이고 에너지 소비로 인한 환경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시의 에너지시책에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는 제품의 제조·가공·유통·판매·처리의 전 과정을 지속가능한 에너지체계로 전환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사업자는 사업 활동에서 생산되거나 소요되는 에너지와 관련된 정보를 시민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 사업자는 시민·시민단체·학교 및 연구단체 등의 연구 및 홍보사업 등 에너지이용 합리화 활동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시행령

[시행 2024. 6. 11.] [대통령령 제34564호, 2024. 6. 11., 일부개정]

□ 제정·개정이유

인구감소지역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지역의 활력을 도모하기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인구감소지역에 문화·관광·체육시설을 설치하거나 인구감소지역 밖의 지역에 설치된 문화·관광·체육시설을 인구감소지역으로 이전하려는 자에 대하여 문화·관광·체육시설의 설치·이전에 따른 근로자의 고용 또는 이주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인구감소지역 내 생활인구 확대를 위한 지원시책 등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 주요내용

제2조(생활인구의 요건) ①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이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른 체류횟수가 월 1회 이상인 사람으로 한다. 이 경우 1일 최대 체류횟수는 실제 체류횟수와 관계없이 1회로 한다.

② 법 제2조제2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1.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라 외국인등록을 한 사람
2.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국내거소신고를 한 사람

제4조(시·도 인구감소지역대응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변경) ①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시·도 인구감소지역대응기본계획(이하 “시·도기본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관할 지역의 인구감소 대응을 위한 기본방향 및 중장기 전략
2. 관할 지역의 인구감소 대응을 위한 정책과제 및 우선순위
3. 관할 지역의 인구감소 대응에 필요한 재원의 지원 및 조정
4. 관할 지역의 인구감소 대응에 필요한 추진체계 및 조직운영
5. 인구감소 대응을 위한 관할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연계·지원
6. 관할 지역의 인구감소 대응을 위한 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
7. 그 밖에 관할 지역의 인구감소 대응을 위해 시·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법 제7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법령의 제정·개정·폐지에 따라 그 내용을 반영하는 경우
2. 착오, 오기(誤記), 누락 또는 이에 준하는 명백한 오류를 정정하는 경우
3. 시·도기본계획의 본질적인 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항으로서 법 제9조에 따른 시·도 인구감소지역대응위원회가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③ 시·도지사는 법 제7조제4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시·도기본계획을 통보한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그 내용을 공개해야 한다.

④ 시·도지사는 법 제7조제5항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도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변경한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에게 그 시·도시행계획을 통보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그 내용을 공개해야 한다.

⑤ 시·도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한 의견 청취 및 협조 요청, 시·도시행계획의 수립·변경의 절차·방법, 시·도기본계획 및 시·도시행계획의 수립·변경에 필요한 세부 사항에 관하여는 제3조제2항·제3항·제7항 및 제8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시·군·구기본계획”은 “시·도기본계획”으로, “시·군·구시행계획”은 “시·도시행계획”으로 본다.

제6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협약 체결 통보) 지방자치단체(인구감소지역을 관할하는 시·도 또는 인구감소지역에 속하는 시·군·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장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협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해당 협약을 체결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행정안전부장관에게 그 내용을 통보해야 한다.

제7조(지방교부세의 특별지원)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14조에 따라 인구감소지역의 시장·군수·구청장이 시·군·구기본계획 및 시·군·구시행계획의 시행과 관련된 특별한 재정수요에 대해 「지방교부세법」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른 특별교부세의 교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심사하여 특별교부세를 교부할 수 있다.

제12조(박물관 또는 미술관의 설립·운영에 관한 특례)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인구감소지역에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따른 박물관(종합박물관은 제외한다) 또는 미술관을 설립·운영하는 자는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령」 별표 2 제2호 가목 및 나목에도 불구하고 2개의 박물관 또는 2개의 미술관에 공동으로 학예사를 둘 수 있다.

제13조(문화·관광·체육시설을 설치·이전하려는 자에 대한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25조제3항에 따라 인구감소지역에 문화·관광·체육시설을 설치하거나 인구감소지역 밖의 지역에 설치된 문화·관광·체육시설을 인구감소지역으로 이전하려는 자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4. 6. 11.>

1. 문화·관광·체육시설의 설치·이전에 대해 우선적으로 인가·허가·승인·등록 등을 하거나 신고를 받는 조치
2. 국가의 예산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서 정하는 범위에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비

용의 일부 지원

가. 문화·관광·체육시설의 설치·이전에 드는 비용

나. 문화·관광·체육시설의 설치·이전에 따른 근로자의 고용 또는 이주에 드는 비용

제15조(실태조사의 범위 등) ① 법 제29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주민만족도
2.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국가·지방자치단체의 행정적·재정적 지원 실태
3. 인구감소지역의 기반시설 또는 생활편의시설 등의 현황
4. 인구감소지역의 생활인구
5. 그 밖에 인구감소지역 지원 및 지역 인구감소 대응을 위해 행정안전부장관(행정안전부장관이 실태조사를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법 제29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른 지방공사
2. 「지방공기업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단
3.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

제16조(인구감소지역대응센터의 구성 및 운영 등) ① 법 제3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성을 갖춘 공공기관”이란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육성법」에 따른 재단법인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을 말한다.

②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인구감소지역대응센터(이하 “인구감소지역대응센터”라 한다)에는 센터장 1명과 지역 인구감소 대응 관련 업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을 둔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인구감소지역대응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관련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④ 인구감소지역대응센터의 장은 매년 2월 말일까지 전년도 운영실적과 다음 연도의 사업계획 등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⑤ 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구감소지역대응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제17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5조에 따른 지원시책 등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 6. 11.]

치매관리법 시행규칙

[시행 2024. 7. 3.] [보건복지부령 제1020호, 2024. 6. 20., 일부개정]

□ 제정 · 개정 이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경도인지장애 진단을 받은 사람에 대하여 치매로의 진행을 억제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서비스를 개발·보급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치매관리법」이 개정(법률 제19904호, 2024. 1. 2. 공포, 7. 3. 시행)됨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경도인지장애 진단을 받은 사람에 대한 서비스의 개발·보급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기관·단체나 전문가 등에게 연구용역을 의뢰하거나 자문할 수 있도록 하고, 경도인지장애 진단을 받은 사람에 대한 서비스에 치매 조기진단, 경도인지장애 관련 상담 및 치매안심센터 등록 관리, 치매 예방 사업, 경도인지장애 진단을 받은 사람의 가족 및 보호자 지원, 경도인지장애 관련 정보 제공 및 지원사업 홍보 등의 내용이 포함되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 주요내용

제2조(치매연구사업의 범위) 「치매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2항제3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치매 관련 교육
2. 치매 관련 정책 연구
3.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치매관리사업(이하 “치매관리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연구사업

제3조(치매의 검진 방법 등) ①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치매검진사업의 대상자에 대한 검진은 치매 가능성이 높은 대상자를 가려내기 위한 선별검사와 치매진단을 위한 정밀검사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치매 검진의 검사 항목, 검사 비용, 판정 기준 등 치매검진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3조의2(치매환자가족 상담·교육 프로그램)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12조의2에 따른 치매환자의 가족을 위한 상담·교육 프로그램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시켜야 한다.

1. 치매에 대한 인식 개선
2. 치매지원서비스 정보 및 치매환자 돌봄 정보 제공

3. 치매환자 가족의 고충 상담

4. 치매환자 가족 자조(自助)모임의 구성·운영

제3조의4(경도인지장애진단자 서비스) ① 보건복지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2조의4제1항에 따라 경도인지장애 진단을 받은 사람에 대한 서비스의 개발·보급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경도인지장애 및 치매 분야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기관·단체나 전문가 등에게 연구용역을 의뢰하거나 자문할 수 있다.

② 법 제12조의4제1항에 따른 경도인지장애 진단을 받은 사람을 위한 서비스에 포함될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치매 조기진단

2. 경도인지장애 관련 상담 및 치매안심센터 등록 관리

3. 치매 예방 사업

4. 경도인지장애 진단을 받은 사람의 가족 및 보호자 지원

5. 경도인지장애 관련 정보 제공 및 지원사업 홍보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경도인지장애 진단을 받은 사람에 대한 서비스의 개발·보급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에 관하여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본조신설 2024. 6. 20.]

제3조의6(치매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13조의2제1항에 따른 치매정보시스템(이하 이 조에서 “치매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통해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

1. 치매관리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자료의 수집·분석

2.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치매등록통계사업

3.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치매안심센터(이하 “치매안심센터”라 한다)의 이용자 현황 등 치매안심센터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자료의 입력·관리

4.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치매 관련 사업과 치매안심센터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치매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제4조(역학조사의 실시 시기·방법 및 내용) ① 법 제14조에 따른 역학조사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치매관리사업의 시행, 치매관리에 관한 연구에 대한 지원 및 정책의 근거자료의 제시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실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역학조사를 하기 위하여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중앙치매센터(이하 “중앙치매센터”라 한다)에 중앙역학조사반을 둔다.

③ 제1항에 따른 역학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9. 9. 27.>

1. 치매환자의 성별, 나이 및 증상

2. 치매의 종류 및 중증도(重症度)

3. 그 밖에 조사 대상의 인구학적·경제학적·사회학적 특성에 관한 사항

제4조의2(치매실태조사의 방법 및 내용) ① 법 제14조의2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이하 이 조에서 “치매실태조사”라 한다)는 자료조사, 설문조사 또는 관계자 면담 등의 방법으로 실시한다.

② 치매실태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치매 가능성이 높은 사람 및 치매 환자의 현황

2. 치매환자의 1인당 연간 진료비 등 치매관리에 드는 비용에 관한 사항

3. 치매에 대한 일반 국민의 인식

4. 치매 관련 기관 및 의료·복지 서비스의 현황

5. 치매환자 가족의 건강상태, 소득·재산 등 경제상태 및 사회적 관계 등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치매의 현황, 비용부담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치매실태조사를 치매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기관·단체나 전문가에게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7조(치매연구사업 수행 절차 등) ① 중앙치매센터는 법 제16조제1항제4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매년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치매연구사업(이하 “치매연구사업”이라 한다)에 관한 시행계획과 지침을 수립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1. 6. 30.>

② 치매연구사업의 연구과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공모과제: 공모에 의하여 심의·선정된 과제

2. 지정과제: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발굴·기획하고, 주관 연구기관과 주관 연구책임자를 지정하는 과제

제7조의2(광역치매센터의 설치·운영 및 위탁) ① 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광역치매센터의 설치기준 및 운영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 법 제16조의2제2항에 따라 광역치매센터의 설치·운영을 위탁받으려는 기관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그 업무의 위탁을 신청해야 한다.

③ 시·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광역치매센터의 설치·운영을 위탁받으려는 기관이 별표 2의 설치기준 및 운영기준을 충족한 경우 광역치매센터의 설치·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⑤ 시·도지사는 법 제16조의2제2항에 따라 광역치매센터의 설치·운영을 위탁하려면 미리 위탁의 기준, 절차 및 방법 등을 9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 참고사항 (우리 시 관련 조례)

「대전광역시 치매관리 및 광역치매센터 설치·운영 조례」

[시행 2019. 10. 18.] [대전광역시조례 제5333호, 2019. 10. 18., 전부개정]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치매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다.

제4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효율적인 치매관리 정책의 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치매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치매실태조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지식 및 연구 경험이 풍부한 연구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제5조(치매관리사업) ① 시장은 치매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1. 치매연구사업, 치매검진사업, 치매환자 의료비 지원, 치매등록통계사업
2. 치매관리사업에 대한 교육·홍보사업
3. 치매관리사업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교육·훈련사업
4. 치매관리사업을 수행하는 법인·단체의 교육 및 홍보
5. 치매환자 재활프로그램 사업
6. 실종치매환자 발생 예방 및 찾기 사업
7. 그 밖에 치매관리에 필요한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단체 등에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광역치매센터의 설치 및 업무) ① 시장은 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광역치매센터(이하 “광역치매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업무
2.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지원
3. 프로그램 개발 및 매뉴얼 보급
4. 치매관련 실태조사 및 관련기관 간 연계시스템 구축
5. 전문가양성 및 교육·훈련
6. 그 밖에 시장이 치매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② 시장은 법 제16조의2제2항에 광역치매센터 설치·운영을 위탁하려면 미리 위탁의 기준, 절차 및 방법 등을 9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③ 법 제16조의2제2항에 따라 위탁하고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④ 그 밖에 위탁자 선정, 계약의 갱신 등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II 다른 자치단체 조례 제·개정

인천광역시 산업보안 강화를 위한 지원 조례

[시행 2024. 6. 10.] [인천광역시조례 제7285호, 2024. 6. 10., 제정]

□ 제정이유

인천광역시 관내 중소기업, 중견기업, 공공기관, 대학 및 연구기관 등의 산업핵심기술 보호 기반 구축 및 산업보안 역량 강화에 필요한 지원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관내에 위치한 중소기업, 중견기업, 공공기관, 대학 및 연구기관 등의 산업보안 역량 강화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천광역시 관내 산업핵심기술 보호기반을 구축하고 지역경제의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산업보안”이란 산업현장의 산업핵심기술을 보호하고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내·외부의 위해 요소로부터 침해되지 않도록 예방·관리하는 활동을 말한다.
2. “산업핵심기술”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술을 말한다.
 - 가.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업기술
 - 나.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국가 첨단전략기술
 - 다.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국가전략기술
 - 라.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핵심전략기술
 - 마.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중소기업기술
3. “중소기업 등”이란 다음 각 목에 따른 기업 및 기관을 말한다.
 - 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 나.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
 - 다.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인천광역시가 설립한 공사 및 공단
 - 라. 「인천광역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출자·출연기관
 - 마. 대학 및 연구기관

제3조(시장의 책무)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인천광역시 관내 산업핵심기술

의 유출방지와 보호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추진계획의 수립·시행) ①시장은 관내에 위치한 중소기업 등의 산업보안 역량 강화 및 지원을 위하여 인천광역시 산업보안 추진에 관한 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산업보안 역량 강화 및 지원 정책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산업보안 역량 강화 및 지원을 위한 기반구축 방안
3. 산업보안 역량 강화 및 지원을 위한 재원조달 방안
4. 산업핵심기술의 보호를 위한 기술개발에 관한 사항
5. 산업보안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6. 산업핵심기술 보호에 대한 홍보 및 교육에 관한 사항
7. 산업핵심기술 보호를 위한 관계 기관 협력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산업보안 역량 강화 및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추진계획과 산업보안 역량 강화 및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중소기업 등의 산업보안 수준 및 역량
2. 중소기업 등의 산업보안 관리 인력 및 현황
3. 중소기업 등의 산업핵심기술 침해 및 분쟁 현황
4. 그 밖에 산업보안 역량 강화 및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산업핵심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중소기업 등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산업보안 지원 사업) ① 시장은 중소기업 등의 산업보안 역량 강화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산업보안 수준 진단, 컨설팅 및 시스템 구축 지원
2. 산업핵심기술 보호를 위한 관련 기술 개발 지원
3. 산업보안 전문인력 양성 및 인식강화 교육
4. 산업핵심기술 유출에 따른 대응 방안 및 법률 자문 제공
5. 그 밖에 중소기업 등의 산업보안 역량 강화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비밀유지 의무) 이 조례에 따른 사무의 수행으로 알게 된 산업핵심기술에 관한 사항은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경상남도 장수노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24. 6. 13.] [경상남도조례 제5660호, 2024. 6. 13., 제정]

□ 제정이유

고령화시대를 맞아 100세 이상 장수노인에 대한 공경 및 예우문화를 조성하고 실효성 있는 지원시책을 발굴·추진함으로써 노후생활의 안녕과 장수를 기원하고 경로효친의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함.

□ 주요내용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수노인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후생활의 안녕과 장수를 기원하고 경로효친의 사회적 분위기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수노인”이란 「주민등록법」상 100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
2. “장수부부”란 한 사람 이상이 장수노인으로 구성된 혼인 관계에 있는 부부를 말한다.
3. “장수도민증”이란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제7조에 따라 장수노인에게 수여하는 증서 또는 증패를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도지사는 장수노인을 위한 공경과 예우의 문화가 지역사회에 조성·확산될 수 있도록 다양한 시책을 발굴·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장수노인의 예우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서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5조(예우 및 지원 계획 수립 등) ① 도지사는 장수노인의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노인복지 관련 계획이 수립될 경우 장수노인의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사업계획 수립을 위하여 시장·군수 및 관련 기관·단체 또는 법인 등에 자료나 의견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사업계획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장수노인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6조(예우 및 지원 사업 등) ① 도지사는 장수노인의 예우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장수노인 100세 맞이 기념 사업
2. 장수노인 생신축하 지원 사업

3. 장수부부 기념 사업

4. 그 밖에 도지사가 장수노인 예우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기관·단체 또는 법인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관련 기관·단체 또는 법인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장수도민증) ① 도지사는 100세를 맞이하는 장수노인에게 이를 축하하기 위하여 장수도민증을 수여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기념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장수도민증의 수여대상자는 경상남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장수노인으로 한다.

③ 장수도민증의 수여대상자가 다른 시·도로 전출한 때에는 수여대상에서 제외한다.

④ 장수도민증의 수여 시기와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주특별자치도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

[시행 2024. 6. 12.]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3724호, 2024. 6. 12., 제정]

□ 제정이유

도내 해양 등 여름철 물놀이 입수객이 지속적으로 증가됨에 따라 하천, 계곡, 유원지 등 여름철 물놀이 장소에 대해 도지사가 물놀이 관리지역으로 지정하고 안전시설 장비 구축, 안전관리요원을 배치하는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름철 물놀이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주민안전의식을 고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물놀이 관리지역” (이하 “관리지역”이라 한다)이란 해수욕장, 하천, 계곡, 유원지 등 여름철 피서를 목적으로 찾는 물놀이 장소 및 시설로서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지정하여 운영하는 장소를 말한다.
2. “물놀이 안전사고” (이하 “안전사고”라 한다)란 수영, 튜브놀이 등 물놀이 중에 발생한 안전사고를 말한다. 다만, 어로행위(낚시, 투망 등), 도하(渡河), 실족 등 물놀이와 연계되지 아니하는 일반 수난 사고는 제외한다.
3. “물놀이 위험구역” (이하 “위험구역”이라 한다)이란 안전사고로 인명피해가 발생하였거나 깊은 수심, 급류, 수심급변 등의 위험요소가 많아 도지사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설정·게시한 구역을 말한다.
4. “물놀이 안전관리요원(이하 “안전관리요원”이라 한다)”이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활동하는 사람으로 제7조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5. “물놀이 안전관리 대책기간”은 여름철 물놀이 장소의 개장 기간 1개월 전부터 개장기간일까지를 말한다.
6. “특별대책기간”은 7월 16일부터 8월 15일까지를 말한다. 다만, 물놀이 여건에 따라 도지사가 필요한 경우 그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3조(안전관리 사전대비계획의 수립) 도지사는 여름철 안전사고의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시행하기 위하여 매년 물놀이 안전관리 대책기간 전까지 해당 연도의 물놀이 안전관리 사전대비계획을 수립·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관리지역의 전수조사 및 위험구역의 설정·게시 계획
2. 물놀이 안전시설(이하 “안전시설”이라 한다)의 정비 및 확충 계획

3. 안전관리요원의 확보(채용 및 배치) 계획
4. 유관기관, 관계부서 및 민간단체와의 협력 구축 계획
5. 도민에 대한 홍보 계획
6. 그 밖에 도지사가 안전사고의 예방을 위하여 추진하는 시책 등

제4조(안전시설의 정비·확충) ① 도지사는 물놀이 안전관리 대책기간 전까지 안전시설을 관리지역 및 위험구역 내에 설치·정비하여야 한다.

② 안전시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험표지판, 사망사고 발생지역 표지판, 위험구역 설정 안내표지판 등 각종 표지판
2. 구명환, 구명로프(투척로프), 구명조끼 등 인명구조함
3. 「제주특별자치도 119시민수상구조대 편성·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른 시설과 장비

4. 그 밖에 인명구조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정하는 시설·장비

③ 도지사는 안전시설의 전체 수량을 산출하여 부족한 장비를 확충하고, 훼손된 장비를 정비하여 물놀이 안전관리대책 기간 전까지 설치·정비를 완료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안전시설의 설치시기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안전시설의 설치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⑤ 해수욕장에서의 안전시설물 설치·관리는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해수욕장 안전관리에 관한 지침」을 적용한다.

제5조(관리지역의 전수조사) ① 도지사는 체계적인 물놀이 안전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도내에 있는 물놀이 장소 및 시설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전수조사된 지역 중 관리지역으로 지정 관리할 필요가 있는 경우 기존 안전시설의 수량, 연간 이용객 수, 수심 등 필요한 기초자료를 정확히 조사하고 해당 지역을 관리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제6조(위험구역의 설정·게시) ① 도지사는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한 위해 방지나 질서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위험구역을 설정할 수 있다.

② 위험구역으로 설정된 장소에는 위험구역 설정 안내표지판 및 부표 등 안전시설을 보기 쉬운 곳에 게시·설치하여야 하며, 일반인의 출입 및 그 밖의 행위를 금지 또는 제한할 수 있다.

③ 위험구역으로 설정된 장소에서 출입 및 그 밖의 행위로 인한 퇴거명령을 위반한 사람에게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89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제7조(안전관리요원) 도지사는 관리지역 내에서 물놀이 안전관리를 위하여 관리지역의 규모, 이용객 수, 교대인력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안전관리요원을 확보·배치하여야 한다.

1. 공무원(사회복무요원을 포함한다)

2. 유급안전관리요원

3. 119시민수상구조대, 의용소방대 등 소방관서에 소속되어 수난구조 및 수변안전을 위해 배치된 인력

4. 재해취약지역의 안전관리 사업을 위하여 「고용정책 기본법」 등 다른 법률에 따라 확보한 인력

5. 재난안전 예방을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에서 활동하고 있는 민간단체에 소속된 인력

제8조(안전관리요원 배치) ① 안전관리요원은 관리지역의 규모 및 지역여건에 따라 배치하되 체계적인 물놀이 안전관리 유지를 위해 도지사가 총괄한다.

② 안전관리요원의 배치장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지정한다.

1. 관리지역의 규모, 지리적 특성

2. 연 또는 일일 평균 이용객 수

3. 관리지역의 안전취약성 등

③ 물놀이 안전관리를 위하여 인명구조대 등을 설치하는 기관 등은 도지사가 수립·시행하는 계획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제9조(배치기준) 관리지역 내 안전관리요원의 배치기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관리지역, 과거 인명피해 발생지역 및 피해우려가 높은 지역: 고정배치

2. 관리지역 이외 지역으로서 인명피해 우려가 있는 지역: 순찰배치

제10조(운영기간) 안전관리요원의 운영기간은 매년 물놀이 장소의 개장 기간 중으로 한다.

다만, 물놀이 여건에 따라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안전관리요원의 운영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제11조(근무시간) 안전관리요원은 여름철 물놀이 장소의 개장 시간까지 근무 한다. 다만, 관리지역의 여건 등을 고려하여 도지사는 근무시간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

제12조(임무) 안전관리요원은 도지사의 지시를 받아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안전사고 예방 예찰 활동

2. 인명구조활동

3. 안전시설의 설치 및 회수

4. 응급환자 응급처치

5. 구명조끼 무료대여

6. 그 밖에 물놀이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제13조(근무복 및 안전장비) ① 도지사는 안전관리요원에게 근무복 및 안전장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근무복 및 안전장비의 종류는 도지사가 정한다.

제14조(지도·감독) ① 도지사는 안전관리요원의 근무상황을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② 안전관리요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근무를 중지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무단으로 근무지를 이탈하는 경우
2. 근무 중 음주·도박 등 부적절한 행위를 하는 경우
3. 감독공무원의 근무 지시에 불응하는 경우
4. 그 밖에 안전관리요원으로 근무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5조(자격기준) 안전관리요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1. 수난구조 관련 유관기관·단체 발급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
2. 수난구조 관련 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사람
3. 수난구조 관련 대학에서 수난구조 및 응급처치 관련 교과목을 이수한 사람
4. 기타 건강상태가 양호하고 봉사정신이 투철한 사람으로써 도지사가 인정하는 사람

제16조(모집·선발) 도지사는 제3조에 따라 수립한 물놀이 안전관리 사전대비계획에 따라 안전관리요원을 모집·선발하여야 한다.

제17조(교육 및 훈련) ① 도지사는 제16조에 따라 모집·선발한 안전관리요원에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1. 구명환, 구명로프(투척로프), 구명조끼 등 안전시설의 사용요령
2. 심폐소생술, 기본응급처리법 등 구급요령
3. 물놀이 안전지도, 홍보 등 근무요령
4. 성폭력·성희롱 등 예방교육

② 교육 및 훈련은 소방학교, 소방서, 해양경찰서 또는 수상구조전문훈련기관 등에 위탁하여 실시하거나 자체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결원에 따라 새로 충원된 안전관리요원에게는 개별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③ 안전관리요원의 교육 및 훈련은 연 4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제18조(안전관리 대응계획의 수립) 도지사는 안전관리 대응계획을 매년 수립·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전담반 구성·운영
2. 휴일 비상근무자의 편성·운영
3. 상황보고체계
4. 유관기관과의 협조 체계
5. 안전시설 및 안전관리요원의 배치
6. 물놀이 안전 홍보계획
7. 그 밖에 도지사가 물놀이 안전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9조(현장점검반) ① 관리지역 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현장점검반을 편성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② 현장점검반은 물놀이 현장점검, 안전수칙 홍보, 감시활동을 하며 특이사항 발생 시 신

속하게 재난관리부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20조(상황보고) ① 도지사는 안전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현장조사 등을 통하여 사고원인 등을 재조사한 후 확인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고서식에는 사고 일시, 장소, 안전시설 및 안전관리요원 배치 유무, 기상 상태, 인명피해 및 인적사항, 사고원인 및 조치결과 등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21조(유관기관과의 협조) 도지사는 제20조에 따른 현장조사 시 사전에 조사된 참고인 진술 등을 관할 경찰서장, 소방서장 등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경찰서장 등은 그 요청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22조(비밀유지) 제21조에 따라 취득한 비밀에 대해서는 비공개로 처리하여야 하며, 소송 등의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없다.

제23조(예산 지원) 도지사는 관리지역 및 위험구역 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안전관리요원 운영 및 안전시설 정비·확충에 따른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제24조(홍보) ① 도지사는 제3조 및 제18조에 따른 사전대비 및 대응계획을 수립할 때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도민 홍보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홍보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TV, 신문, 라디오, 차량이용 방송, 전광판
2. 휴대전화, 인터넷, SNS 매체
3. 반상회보, 전단지, 현수막
4. 민방위경보장치, 재난 예·경보시설 등

III 자치법규 참고정보

법제처 자치법규 의견제시 사례 소개 1.

[안건번호: 의견24-0116 / 요청기관: 울산광역시 남구]

☐ 의뢰안전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내 교통안전시설의 설치·관리에 관한 사항을 자치구의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 주요내용

[질의요지]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내 교통안전시설의 설치·관리에 관한 사항을 자치구의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의견]

질의요지와 같은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유]

「지방자치법」 제28조제1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 즉 자치사무와 단체위임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각주: 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2추145 판결 참조), 이 사안에서는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내 교통안전시설의 설치·관리에 관한 사무가 자치구(각주: 지방자치단체인 구를 말하며(「지방자치법」 제2조제2항), 이하 같음.)의 자치사무인지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먼저, 교통안전시설의 설치·관리와 관련하여, 「도로교통법」 제3조제1항에서는 특별시장·광역시장·제주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광역시의 군수는 제외하며, 이하 “시장등”이라 한다)는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신호기 및 안전시설(이하 “교통안전시설”이라 한다)을 설치·관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47조제1항에서는 시장등은 이 법에 따른 권한 또는 사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경찰청장이나 경찰서장에게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에서는 특별시장 및 광역시장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구역의 구청장(자치구의 구청

장을 말한다)과 군수에게 위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마련된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제1항에서는 특별시장·광역시장의 권한 중 같은 법 제3조제1항에 따른 교통안전시설의 설치·관리에 관한 권한(제1호)을 시·도경찰청장에게 위임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에서는 특별시장·광역시장의 권한 중 구 및 군 소속 단속담당공무원의 임면권(제1호) 등을 관할구역의 구청장 및 군수에게 위임하고 있으나 교통안전시설의 설치·관리에 관한 권한을 위임하는 규정은 두고 있지 않습니다.

다음으로,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해당 보호구역 내 교통안전시설의 설치·관리와 관련하여, 「도로교통법」 제12조제1항에서는 시장등은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유아교육법」 제2조에 따른 유치원(제1호) 등의 시설이나 장소의 주변도로 가운데 일정 구간을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자동차등과 노면전차의 통행속도를 30킬로미터 이내로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정·해제 절차 및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 행정안전부 및 국토교통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5항에서는 시장등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어린이 보호구역에 어린이의 안전을 위하여 신호기(제1호), 안전표지(제2호), 「도로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도로의 부속물 중 과속방지시설 및 차마의 미끄럼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제3호) 및 그 밖에 교육부, 행정안전부 및 국토교통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또는 장비(제4호)를 우선적으로 설치하거나 관할 도로관리청(각주: 「도로교통법」에서는 도로관리청을 정의하는 명시적인 규정은 없으나, 같은 법 제70조제1항에서 도로관리청이 「도로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허가 등을 한 경우 경찰청장 등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도로법」 제23조에 따른 도로관리청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이며, 이하 같음.)에 해당 시설 또는 장비의 설치를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한편, 같은 법 제12조의2제1항에서는 시장등은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노인 또는 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제1호) 등의 시설 또는 장소의 주변도로 가운데 일정 구간을 노인 보호구역으로,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제4호)의 주변도로 가운데 일정 구간을 장애인 보호구역으로 각각 지정하여 차마와 노면전차의 통행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에서는 노인 보호구역 또는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해제 절차 및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및 국토교통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도로교통법령의 위임에 따라 마련된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이하 “어린이보호구역등지정관리규칙”이라 한다) 제6조에서는 「도로교통법」 제14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제1항에 따라 같은 법 제3조제1항에 따른 교

통안전시설의 설치·관리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시·도경찰청장으로 하여금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시설 또는 장소의 주 출입문과 가장 가까운 거리에 위치한 간선도로의 횡단보도에는 신호기를 우선적으로 설치·관리하도록 하고(제1항), 보호구역의 종류에 따라 안전표지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제3항).

그리고,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0조제1항 및 별표 1에서는 「지방자치법」 제14조제1항의 배분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종류별로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거목에서는 ‘교통신호기, 안전표지 등의 설치·관리에 관한 사무’를 시·군·구의 자치사무의 예시로 규정하고 있는 한편, 같은 법 제2조제2항에서는 자치구는 특별시와 광역시의 관할 구역의 구만을 말하며, 자치구의 자치권의 범위는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군과 다르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마련된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제2항 및 별표 2에서는 시·군과 다르게 자치구에서 처리하지 않고 특별시·광역시에서 처리하는 사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별표 제14호에서는 자치구에서 처리하지 않고 특별시·광역시에서 처리하는 사무로 ‘교통신호기, 안전표지 등의 설치·관리 등에 관한 사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살피건대, 「도로교통법」에서는 교통안전시설의 설치·관리 주체를 일관되게 “시장등”, 즉 “특별시장·광역시장·제주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로 규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교통안전시설의 설치·관리에 관한 사무가 이들의 자치사무인지 국가사무가 기관위임된 것인지는 별론으로 하고, “자치구의 구청장”을 해당 사무의 권한자에서 제외하고 있음이 문언상 명백하므로, 교통안전시설의 설치·관리에 관한 사무가 자치구의 사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시행령」 별표 1에서 시·군·자치구의 사무로 ‘교통신호기, 안전표지 등의 설치·관리에 관한 사무’를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별표에 대한 특례 규정이라 할 수 있는 별표 2에서는 동일 사무에 대하여 자치구에서 처리하지 않고 특별시·광역시에서 처리하는 사무로 규정함으로써 자치구에 대해서는 동일한 생활권을 갖는 특별시·광역시 내 다른 자치구와의 유기적 연계성을 고려하여 일정한 사무에 대해 같은 수준의 기초자치단체인 시·군과는 다른 범위의 자치권을 갖도록 하고 있는 지방자치법령의 규정체계도 이 사안을 판단할 때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울산광역시 남구 구청장이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내 교통안전시설의 설치·관리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내용을 자치구의 조례에 규정하는 것은 상위법령에 위배될 소지가 있는바, 질의요지와 같은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법제처 자치법규 의견제시 사례 소개 2.

[안건번호: 의견24-0152 / 요청기관: 경상남도 거제시]

□ 의뢰안건

거제시민이 아닌 자에게 거가대교 통행료를 지원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각주: 거제 시민이 아닌 자에게 거가대교 통행료를 지원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하는 것이 「지방재정법」의 규율 범위에 부합하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함.)

□ 주요내용

[질의요지]

거제시민이 아닌 자에게 거가대교 통행료를 지원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의견]

질의요지와 같은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유]

현행 「거제시 거가대교 통행료 지원 조례」는 거가대교를 이용하는 거제시민에게 통행료를 지원함으로써 시민의 경제적 부담 경감과 이동권을 보장하여 시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하는 조례로서(제1조), 거제시에 주민등록을 마치고 실제 거주하는 시민을 대상으로 통행료를 지원하고 있는데(제5조제1항), 「거제시 거가대교 통행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통행료의 지원대상을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주민까지 확대하려는 것으로, 이 사안은 거제시의 조례로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을 규율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5조 및 제6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구역과 변경절차를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6조에서는 그 구역 안에 주소를 가진 자가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이 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은 그 지역적 관할과 인적 관할의 범위에서 미치는 것이 원칙이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소관 사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우 그 소관 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한도에서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관할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관할구역의 주민이 아닌 자를 조례의 적용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각주: 법제처 2022. 9. 28. 의견제시 22-0237; 법제처 2022. 5. 31. 의견제시 22-0142; 법제처 2020. 8. 26. 회신 의견 20-0189 참조).

살피건대, 거제시민이 아닌 자에게도 거가대교 통행료를 지원하려는 것은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이 거제시로 방문하도록 유도함으로써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기여하려는 것으로 보이는바, 이는 「지방자치법」 제13조제2항제4호더목에서 자치사무의 하나로 예시하고 있는 ‘지역경제의 육성 및 지원’ 사무에 부합한다 할 것이므로, 해당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에게 거가대교 통행료를 지원하는 것은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관할을 침해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질의요지와 같은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Ⅳ 최신 외국 입법정보

세계 각국의 장애인용 객실 규정

□ 주요내용

우리나라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및 동 시행령에 따르면 객실 수가 30실 이상인 일반숙박시설 및 생활숙박시설은 전체 침실수 또는 객실의 1퍼센트 이상(관광숙박시설은 3퍼센트 이상)을 장애인 이용 가능 객실과 편의시설로 갖추어야 한다. 이 법 규정에 위반한 경우, 시설주관기관은 그 시설주에게 시정명령을 할 수 있고, 시정명령을 받은 시설주가 기간 내에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이와 관련하여 세계 각국의 장애인 전용 객실 의무규정은 어떠한지 살펴보고자 한다.

독일

독일 「식품접객업법」 제4조에 따르면 장애인이 어려움 없이 이용할 수 있는 설비(이하, 배리어프리 설비)를 갖추지 아니한 영업소는 영업허가가 거절될 수 있으며, 이러한 배리어프리 설비와 관련한 기준은 각 주정부에서 정할 수 있다. 독일에서 배리어프리 객실은 휠체어 사용을 고려하지 아니한 B 스탠다드형과 휠체어 사용이 가능한 R 스탠다드형으로 나뉜다. 각 주의 건축부 장관이 회합하는 건축장관회의(Bauministerkonferenz)에서 제정된 「숙박업 모델 규정」 제11조에 따르면 숙박시설 침대의 10% 이상이 B 스탠다드형 객실에 위치하여야 한다. 그리고 침대의 개수가 60개 이상인 숙박시설에서는 이 조건과 더불어 침대의 1% 이상이 R 스탠다드형 객실에 위치하여야 한다.

러시아

러시아는 시행규칙 257.1325800.2020의 6.2.7에 따르면, 이동 제한이 있는 사회계층의 접근성을 감안한 설계 및 설비가 갖추어진 객실은 전체 객실의 최소 3%에 해당하여야 한다. 또한, 시행규칙 59.13330.2020의 7.1.1에 따르면, 객실 수가 20개 미만인 경우, 장애등급 M2-M4에 해당하는 사람이 지낼 수 있는 객실 수는 최소 1개 이상이어야 한다.

우즈베키스탄

2021년 1월부터 시행된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모든 숙박업소는 한 개

이상의 장애인 객실을 설치해야 하며, 객실 내에는 시각·청각 장애인을 위한 디스플레이 및 음성 안내 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위반업소의 경우 「행정책임법」에 따라 기본회계액의 최대 30배에 달하는 과징금을 납부해야 한다.

*기본회계액이란 우즈베키스탄에서 최저임금 산정 등에 사용되는 액수로 2024년 기준 340,000숨(한화 약 37 000원)이다.

인도네시아

인도네시아는 「건축물 시설 요건에 관한 공공사업주택부령 제14/PRT/M/2017호」 제55조 및 별표4에 따라 200개 객실 당 1개 이상의 범용디자인(universal design)을 갖춘 객실을 마련할 것을 규정하였다. 다만 해당 규정의 위반에 관한 제재 규정은 별도로 두고 있지 않다.

말레이시아

말레이시아는 「2008 장애인법」 제26조에서 장애인은 공공시설, 편의시설, 서비스 및 건물에 대해 비장애인과 동등한 접근성을 보장받고 사용할 권리가 있다고 규정했다. 이에 따라 「1992 관광산업법」 제31C조제1항에 따른 숙박시설의 신청 조건으로서 관광숙박시설에 장애인을 위한 객실 1실과 공중화장실을 설치해야 하며, 숙박업체는 숙박업 및 호텔 운영 면허 발급 당국 또는 정부로부터 장애인시설 설치 확인 서류를 발급받아야 한다.

베트남

베트남 「장애인의 접근·이용 보장을 위한 시설물 건축에 관한 국가기술기준」(QCVN 10:2014/BXD)에 따르면 100실 이하의 객실을 보유한 호텔, 모텔 및 여관은 최소 5퍼센트 이상의 장애인 이용 가능 객실을 갖추어야 하며, 객실 수 100개씩 추가 보유 시 장애인용 객실 1개씩 추가로 확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멕시코

멕시코에는 장애인 전용 객실 의무를 규정하는 법률은 따로 존재하지 않으나 「멕시코 호텔 등급 분류 시스템 지침을 발행하는 협약」에 따라 장애인 전용 객실 보유 여부에 따라 호텔 등급을 결정하는 점수를 최소 0점에서 16점까지 부여한다.

아랍에미리트

아랍에미리트의 경우 6개 토후국 중 하나인 샤르자(Sharjah)토후국에서 「2019년 제38호 샤르자토후국 내 숙박시설 분류에 관한 집행위원회 결정」 별첨목록(10)의 제(1-3-6-1)호 규정을 통하여 호텔, 콘도 등을 포함한 숙박시설 내 의무적으로 갖추어야 하는 장애인 전용 객실수를 전체 객실 중 최소 1%(최소 2개 객실)로 명시하고 있다. 이 객실에는 장애가 있는 고객의

간병인 출입을 위한 공용문이 갖추어져야 한다.

영국

영국은 장애인 객실비율과 관련하여 「2010 건물규정」, 「2010 평등법」 등을 참고할 수 있다. 2010년부터 2015년까지는 건물규정에 적어도 1/20의 휠체어 객실비율을 요건으로 하였으나 현재는 법령상 객실 내의 방문넓이, 욕실, 침실 등의 필수요건은 제시되어 있지만 객실 수에 있어서는 합리적인 조정(reasonable adjustment)이라고만 규정되어 있다.

미국

미국은 「미국장애인법」과 「미국장애인법에 따른 건물시설 접근성 기준 및 건축물장벽법 접근성 기준」에 따라 호텔 등 숙박시설에서 장애인 객실을 일정 수 또는 비율로 설치하여 제공할 것을 요구한다. 구체적으로는 장애인 객실의 유형에 따라 달리 규정되어 있으며, 그 수는 전체 객실 수를 기준으로 점증한다. 장애인 객실의 유형은 크게 장애인의 원활한 이동을 보장하여 접근성을 높인 객실(편의상 ‘이동권 보조 객실’이라 한다)과 청각장애인을 위한 보조 설비를 갖춘 객실 등 둘로 나뉘며, 이동권 보조 객실은 다시 휠체어 출입이 가능한 욕실을 구비한 객실과 그렇지 않은 객실로 세분된다. 청각장애인용 객실은 이동권 보조 객실과 별도로 마련하여야 한다. 다만, 숙박시설의 모든 이동권 보조 객실 중 최소 1곳은 반드시 청각장애인용 객실 겸용이어야 하고, 이 두 유형의 객실을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으나 그 수가 이동권 보조 객실 총수의 10퍼센트를 넘을 수 없다.

싱가포르

싱가포르는 건설청(BCA)에서 공표하는 건설기준인 「2019 건축 환경에서의 접근성에 관한 기준」을 적용하여 호텔, 호스텔 등을 포함한 모든 숙박시설에 장애인 접근성을 갖춘 객실을 100객실당 1실 이상 두도록 하고 있다. 또한, 호텔의 경우에는 고령자 친화적 특징(화장실 안전손잡이 등)을 갖춘 객실을 50객실당 1실 이상 두어야 한다.

일본

일본은 「고령자, 장애인 등의 이동 등의 원활화 촉진에 관한 법률」 및 동 시행령 규정을 적용하여 객실 수가 50실 이상인 호텔 또는 여관의 경우, 휠체어 사용자가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는 객실을 객실 총수에 100분의 1을 곱한 수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바닥면적 2000제곱미터 이상인 호텔 또는 여관이 해당 법령 규정에 위반한 경우, 소관 행정청은 건축주 등에게 그 위반을 시정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명령할 수 있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 300만 엔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대만

대만 「심신장애인권익보장법」 제57조 및 「건설기술규칙」 제167-7조 규정에 의해 숙박시설의 객실 수가 16개 이상 100개 이하인 경우, 장애인 객실을 1개 설치하고, 객실 수 100개 증가 시마다 1개씩 추가로 설치해야 한다. 또한 공용공간에는 장애인이 이용하기 편리한 전용 화장실, 승강기, 계단 등 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해당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심신장애인권익보장법」 제88조에 의해 해당 건물 소유자 혹은 관리기관 책임자에게 6만 대만 달러 (한화 약 256만 원) 이상 30만 대만 달러 (한화 약 128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정해진 기간 내에 개선하도록 명령할 수 있으며, 기간 내에 개선되지 않는 경우에는 개선될 때까지 처벌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물, 전기 공급을 중단하거나 시설을 봉쇄, 강제 철거할 수 있다.

중국

중국은 장애인 객실 수를 의무화하는 법령은 없으나, 「국가표준 베리어프리 설계 규범(GB 50763-2012)」에서 총 객실 수에 따른 장애인 객실 수량을 규정하고 있다. 객실 수가 100실 이하인 경우 장애인 객실 수는 1실~2실, 객실 수가 100실~400실인 경우 2실~4실, 객실 수가 400실 이상인 경우 최소 4실을 설치하여야 한다. 이 표준은 강제성 표준으로 법률, 행정법규와 마찬가지로 준수 의무가 있다.

태국

태국 2021년에 개정된 「2021년 건축물에서의 장애인 및 노약자용 편의시설을 규정하는 부령(제2호)」 제27조에 따르면, 숙박시설에는 장애인 및 노약자용 편의시설을 설치한 객실을 각 층마다 1개의 객실, 단층건물인 경우 10개의 객실 당 1개의 객실을 갖추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이 부령에서는 이를 위반한 경우에 대한 벌칙은 규정되어 있지 않다.

튀르키예

튀르키예는 ‘관광시설 기준에 관한 규정’ 제18조제b)호에 따라, 총 80실 이상의 객실을 갖춘 숙박시설, 4성급 및 5성급 호텔, 리조트의 경우 총 객실 수의 1퍼센트 이상(최소 1객실)을 장애인 이용 가능 객실로 설치하여야 한다. 객실 입구에는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표찰을 설치하여야 하며 객실 내부에는 휠체어 이용에 적합한 바닥재와 미닫이 또는 개방형 옷장을 설치하여야 한다. 그 외 상세기준은 ‘관광시설 기준에 관한 규정의 시행에 관한 고시’에 규정하고 있다.

브라질

브라질은 「브라질 장애인 사회 포용법(장애인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호텔, 여관 기타 숙박시설의 경우, 장애인 편의 시설이 설치된 객실을 적어도 1실 이상 갖추어야 하며, 전체 객

실의 10% 이상을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는 형태로 제공해야 한다.

프랑스

프랑스의 경우 법령에 장애인 우선 객실을 따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법률 제2005-102호」에 따라 모든 장애인들이 접근 가능하도록 병원 등 전문직이 운영하는 시설, 호텔, 상점, 식당, 은행, 교육문화시설 및 종교시설 등 공중이용시설(ERP)을 개선하도록 한 바 있다. 위반 시 「건축주거법전」 제L183-4조 등에 따라 해당 시설의 소유자, 건축가, 운영자 또는 책임자는 45,000유로(한화 약 6,600만 원)의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으며, 시설이 폐쇄될 수 있다.

[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세계 각국의 장애인용 객실 규정”, 공공누리 제1유형, 2024. 6. 27.